

KWDI

해외통신

2021년 12월 (2021.12.1 ~ 12.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핀란드 FINLAND



핀란드 정부, 직장 내 임금 열람 허용하는 법안 추진

박서희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최근 핀란드 정부는 근로자가 같은 직장 내 동료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임금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직장 측에 의사를 밝히고 본인의 주변 동료들이 받는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기획하게 된 취지 중 하나는 바로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감소다.
- 사실 핀란드에서는 매년 11월 첫 업무일, 국민 누구든 원하면 특정 납세자의 수입과 세금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일명 '질투하는 날'이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는데, 평범한 본인의 이웃, 직장 동료, 또는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업인 등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을 열람하고 싶다고 국세청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비과세 소득, 기업 소득 감면 같은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기본적인 연수입, 금융 자산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실제로 언론사 기자들은 한 해 동안 가장 수입이 높았던 사람, 유명인사의 소득 등 정보를 열람하고 보도하기 위해 정보열람이 가능한 날 이른 아침부터 국세청 앞에 긴 줄을 형성하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 매우 사적인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정부는 투명성이라는 가치 차원에서 매년 11월 이와 같은 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투명성 제고보다 가십거리, 심리적인 경쟁심 유발 혹은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 최근 발표한 핀란드 정부의 법안 추진 계획의 경우 위 소개한 소득열람 및 공개는 1년에 한 번, 이벤트와 같이 매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지속적으로 같은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이 차별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핀란드산업연합회, EK), <https://ek.fi/en/> (접속일: 2021.12.21.).
- OECD, "Gender wage gap,"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접속일: 2021.12.21.).
- Reuters(2021.11.11). "Finland plans to let workers see colleagues' salaries to close gender pay gap,"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land-plans-let-workers-see-colleagues-salaries-close-gender-pay-gap-2021-11-11/> (접속일: 2021.12.21.).
- The New York Times(2018), "Happy 'National Jealousy Day!' Finland Bares Its Citizens' Taxes," (접속일: 2021.12.21.).
- <https://www.nytimes.com/2018/11/01/world/europe/finland-national-jealousy-day.html>
- Yle(2021.11.12.), "Union calls for salary transparency to tackle Finland's gender pay gap", <https://yle.fi/news/3-12186025> (접속일: 2021.12.21.).

📌 OECD에서 발표하는 성별 임금 격차 통계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17.2% 임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19년 데이터 기준), 하위권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들 평균 12.5%보다도 높다(2019년 데이터 기준). 노르웨이 8위, 덴마크 9위, 스웨덴은 12위로, 이웃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핀란드의 남녀임금 격차 문제는 주목할 만한 수준이다. 핀란드 내 평등 옴부즈만(Finnish Equality Ombudsman) 2018년 보고서는 남녀임금 격차 문제의 원인으로 성별 직종분리 경향이 아직 만연하다는 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다는 점, 여성이 승진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은 점 등을 지적했다.

📌 2016년부터 핀란드 정부는 고용주연합회, 노동조합들과 협력하여 평등임금프로그램(Equal Pay Programme)을 추진해왔다. 평등임금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성별에 기반을 둔 직종분리 지양, 성별 임금 격차 감소, 임금 지급 시스템 개선, 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는 1986년 제정되고 2016년 개정된 남녀평등법(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이 제정되어 있으며 본래 법 테두리 안에서 남녀 고용 및 임금에서의 평등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제정되는 데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발표된 뒤 노동조합, 고용주 연합회 양측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 비판 배경은 다소 상이한데, 우선 노동조합들은 현 법안보다 보다 강력한 임금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용주 연합회는 현 법안이 직장 내 갈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우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노동조합들과 평등 옴부즈만 측은 이미 지난 세번의 정부 임기동안 충분한 사전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한 노동조합의 대표는 이번 법안을 두고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태도와 문화를 바꾸게끔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번 법안이 상정된 이후 핀란드의 주요 고용주들이 회원으로 있는 연합회인 핀란드산업 연합회(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 EK)는 법안에 반대하면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의회 내 임금 투명성 실무회의(working group)에서 탈퇴했다. 핀란드산업연합회는 핀란드 내 경제단체 중 가장 큰 단체로, 20여 개 연합, 15,300여 기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중 96%가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회원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만 9만여 명에 달한다. 산업연합회의 한 선임 법률고문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개인 근로자의 임금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면 근로문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5개 정당 연합정부로 조직된 핀란드 정부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도다. 토마스 블롬퀴스트(Thomas Blomqvist) 평등정책 장관(Equality Minister)은 한 언론사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주요 중점방향 중 하나가 불평등한 임금 격차 감소"라고 밝히며, 2023년 4월 선거 전에 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법안 초안이 마련된 이후 여러 이견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으며, 계속 계획되었던 세부적인 절차 추진이 연기되고 있다. 블롬퀴스트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핀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직장 내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 내역 열람 허용은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기업으로서도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따라서 투명성 제고 및 임금 격차 해소라는 대의와 개인 정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고용주, 노동조합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GERMANY



여성폭력 증가에 지속적으로 대책 강화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에서 파트너 간 발생한 폭력이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협, 신체 폭행, 성폭력 등 폭력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이 정부에서 여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긴급전화'(Das Hilfetelefon, 08000 116 016)에 연락한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파트너십 폭력피해자 수는 2019년 141,792명에서 2020년 148,031명으로 증가했다. 폭력 피해는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폭력 피해자의 80.5%가 여성, 가해자의 79.1%가 남성이다. 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의 37.9%는 전 파트너 또는 현재 파트너였고, 이외에도 부부 관계나 같이 사는 관계 내에서 폭력이 계속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30세에서 40세 사이 여성의 피해가 가장 컸다. 2020년에는 139명의 여성과 30명의 남성이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
- 이는 연방 법무부와 연방범죄수사청(BKA), '긴급전화'가 함께 발표한 2020년 파트너십 폭력에 관한 내용이다. 크리스티네 램브레히트 법무부 장관은 "많은 여성에게 자신의 집이 공포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매시간 평균 13명의 여성이 파트너 간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2.5일마다 지금 파트너 또는 전 파트너의 폭력 행위로 인해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지원과 폭력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51.2%)은 가해자와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었다.
- 2020년 파트너 폭력의 피해자(미수 범죄 포함) 수는 아래와 같다.

살인 피해자: 여성 359명, 남성 101명
 고의적 신체 폭행 피해자: 여성 72,013명, 남성 19,199명
 협박, 스토킹, 강압 피해자: 여성 29,301명, 남성 3,721명
 자유 박탈 피해자: 여성 1,567명, 남성 192명
 위험한 신체적 상해 피해자: 여성 12,449명, 남성 5,570명

참고자료

- BMFSFJ(2021.11.23.), <Gewalt in Partnerschaften im Jahr 2020: 4,9 Prozent mehr Fälle als im Vorjahr>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ewalt-in-partnerschaften-im-jahr-2020-4-9-prozent-mehr-faelle-als-im-vorjahr-187202>
 (접속일: 2021.12.31.)
- Strafgesetzbuch § 238 Nachstellung,
<https://dejure.org/gesetze/StGB/238.html>
 (접속일: 2021.12.31.)
- undesministerium der Justiz(2021.8.17.),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effektivere Bekämpfung von Nachstellungen und bessere Erfassung des Cyberstalking",
<https://www.bmj.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Cyberstalking.html>
 (접속일: 2021.12.31.)
- BMFSFJ(2021.5.10.), "Hilfetelefon "Gewalt gegen Frauen" ist Rettungsanker in Krisenzeit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hilfetelefon-gewalt-gegen-frauen-ist-rettungsanker-in-krisenzeiten-179204/>
 (접속일: 2021.12.31.)

독일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파트너 간 폭력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2020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 기간 중 4월에는 전년 대비 2.9%, 5월에는 3.7% 폭력 신고가 증가했다. 이어 2차 락다운 기간이었던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반대로 전년 대비 폭력 신고 건수가 1.5% 감소했다. 이 중 12월에는 3.2%까지 떨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봉쇄조치에 의한 폐쇄적인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기 더 어려워졌고, 외부인이 주변에서 폭력 행위를 알아차리기 더 어려워져서 신고가 줄어들었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긴급전화(Das Hilfetelefon)’의 2020년 연간보고서 자료는 이를 뒷받침한다. ‘긴급전화’에 따르면 여성 폭력 상담 전화에 2020년 51,000건 이상의 상담 세션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접수된 상담주제는 ‘가정폭력’이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20% 증가했다. 피해 여성들은 위험 상황에서 많은 경우 경찰이나 구조 서비스를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다.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의 신고도 늘었는데, 이전보다 이웃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변 폭력 상황을 목격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국어 상담 건수도 25% 증가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민 경험이 있는 여성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한 상담도 15% 증가했다.

2013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긴급전화’ 상담은 24시간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화뿐만 아니라 웹사이트(www.hilfetelefon.de)에서 바로 응답이 가능한 채팅,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독일어 외에도 영어, 쿠르드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7개 언어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는 아랍어, 러시아어, 터키어다.

이에 독일 정부는 폭력피해자 지원과 예방 강화를 위해 연방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천만(한화 약 404억 원) 유로를 쓰고 있다. 이 예산은 여성보호소와 전문상담소의 확장과 신축 및 개조를 위해 쓰인다. 이와 함께 여성 보호소와 상담 센터의 디지털 기술과 장비 강화를 위한 혁신 예산도 따로 마련했다. 앞으로 폭력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경찰, 사법부, 여성지원시설, 청소년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00여 명이 e-러닝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 대처에 추가 교육을 받고 있다.

관련법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238조를 개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타인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자에게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주지를 강제로 옮기거나 일터를 바꿔야 했다. 이후 2017년 한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올해 다시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법안은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해 <타인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속적인’ 행위>에서, <‘경미하지 않게’ 위협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개정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조건이었던 ‘심각한 위협’과 ‘지속적인 행위’만으로는 폭넓은 스토킹 범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가중처벌이 되는 중범죄에 대한 조항을 마련했다. ‘특별히 중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친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건강을 해친 경우 ▲ 최소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수차례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 타인을 엿보거나 관찰, 엿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앱 등을 사용한 경우 ▲ 가해자가 21세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등이다. 또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및 친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국 UNITED KINGDOM



남녀 건강 불평등 격차 해소 위해 여성 건강정책 개선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 정부가 남녀 건강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 건강 정책을 대폭 손본다. 영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영국 남성보다 높긴 하지만 영국 정부는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여성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 정책을 개발 중이다. 본론에서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일반 시민과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했던 ‘The Call for Evidence’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소개한 전 생애 접근 방법(life course approach)을 중심으로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살펴본다.

여성 건강정책에 여성 목소리 제대로 담기지 않아

영국 건강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21년 12월 23일 남녀 건강 불평등 격차 해소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한 보고서 ‘잉글랜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비전(Our Vision for the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여성 건강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된 사업 ‘The Call for Evidence’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3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주간 진행된 The Call for Evidence는 크게 세 가지로 항목으로 구성됐다. 1) 잉글랜드 16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Let’s talk about it’이라는 설문 조사 2) 여성 건강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일반 시민과 단체들의 서면 의견 수렴 3) 요크대학교와 협력해 잉글랜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담 등이 사업에 포함됐다. 이 사업에는 14주간 10만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전문가 집단이 400건이 넘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사업에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현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업 참여자들은 병원 진료를 볼 때 간호사나 의사들이 여성 환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Let’s talk about it’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만8813명 중에서 84%가 병원 진료를 볼 때 간호사나 의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월경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이러한 통증이 ‘정상’이라고 말한대거나, 월경 통증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성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만난 적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80%가 넘었다.

참고자료

- GOV.UK(2021.12.23.), “Our Vision for the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42631/dhsc-our-vision-for-the-women_s-health-strategy-for-england.pdf (접속일: 2021.12.28.).
- GOV.UK(2021.12.), “Results of the ‘Women’s Health - Let’s talk about it’ surve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43211/results-of-the-womens-health-lets-talk-about-it-survey.pdf (접속일: 2021.12.28.).
- GOV.UK(2021.12.23.), “Government sets clear ambition to close gender health gap”,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sets-clear-ambition-to-close-gender-health-gap-3> (접속일: 2021.12.28.).
- GOV.UK(2021.10.29.), “More support for women experiencing the menopause”, <https://www.gov.uk/government/news/more-support-for-women-experiencing-the-menopause> (접속일: 2021.12.28.).

📌 둘째, 영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전문가 집단이 전달한 서면 의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여성 건강 정책을 총괄하는 리더 중 여성 건강 전문가와 여성 비율을 높여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데이터 부족이다. 보고서는 “자궁내막증, 폐경 같이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여성 질환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폐증, 심혈관 질환 등 많은 질병 연구가 남성 참가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여성의 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대입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 건강정책에 여성 목소리 제대로 담기지 않아

📌 영국 건강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21년 12월 23일 남녀 건강 불평등 격차 해소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한 보고서 ‘잉글랜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비전(Our Vision for the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여성 건강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된 사업 ‘The Call for Evidence’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3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주간 진행된 The Call for Evidence는 크게 세 가지로 항목으로 구성됐다. 1) 잉글랜드 16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Let’s talk about it’이라는 설문 조사 2) 여성 건강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일반 시민과 단체들의 서면 의견 수렴 3) 요크대학교와 협력해 잉글랜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담 등이 사업에 포함됐다. 이 사업에는 14주간 10만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전문가 집단이 400건이 넘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사업에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현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사업 참여자들은 병원 진료를 볼 때 간호사나 의사들이 여성 환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Let’s talk about it’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만8813명 중에서 84%가 병원 진료를 볼 때 간호사나 의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월경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이러한 통증이 ‘정상’이라고 말한다거나, 월경 통증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성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만난 적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80%가 넘었다.

📌 둘째, 영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전문가 집단이 전달한 서면 의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여성 건강 정책을 총괄하는 리더 중 여성 건강 전문가와 여성 비율을 높여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데이터 부족이다. 보고서는 “자궁내막증, 폐경 같이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여성 질환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폐증, 심혈관 질환 등 많은 질병 연구가 남성 참가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여성의 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대입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PharmaTimes(2021.11.1.),
“UK government to cut cost of
repeatable HRT prescriptions”,
https://www.pharmatimes.com/news/uk_government_to_cut_cost_of_repeatable_hrt_prescriptions_1382807
(접속일: 2021.12.28.).

질병 치료에서 질병 예방으로 정책 방향 전환

- 📌 영국 정부 여성 건강 정책을 대폭 손보기 위해 정책 방향을 바꿨다. 기존 정책은 특정 나이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에 초점을 맞추는 질병 중심 접근법 (disease-orientated approach)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 생애 접근법 (life course approach)를 도입해 여성 생애 전체에 걸쳐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건강 상태를 추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즉, 질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초점을 맞추기보다 질병 예방에 집중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잉글랜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비전’ 보고서는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 증상이 있는 여성은 임신을 했을 때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면서 “전 생애 접근법을 도입하면 여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예측해 예방하고, 여성 전 생애에 걸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해 여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The Call for Evidence’ 사업을 통해 수집한 여성 의견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여성 환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를 대표해 여성 건강 대사 (Women’s Health Ambassador)를 임명해 여성의 목소리를 여성 건강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데이터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립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 지원을 받는 국가 연구를 비롯해 보건의로 연구를 실시할 때 연구 참여자 성비를 맞추는 식으로 정부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캐롤린 하리스 하원의원은 2021년 10월, 갱년기 여성이 호르몬 대체 요법 (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 처방전을 받을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갱년기 여성이 호르몬 대체 요법 처방전을 받을 때 한 번만 최대 19파운드 (약 3만5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 1년간 무료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 환자가 매년 약 205 파운드 (약 33만원)를 아낄 수 있다.
- 📌 2021년 12월 발간된 영국 건강사회복지부 보고서 ‘잉글랜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비전(Our Vision for the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의 핵심은 여성 건강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The Call for Evidence’ 사업에는 14주간 1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해 여성 건강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고, 여성 건강 전문가들이 400건 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영국 정부가 질병 치료에서 질병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